

이명박, 징역 17년 · 벌금 130억 확정

‘다스’ 의혹 첫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다스 실소유’ 하며 비자금 300억 횡령 혐의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 요구한 혐의까지
1심, 징역 15년 · 2년, 17년... 뇌물 추가 인정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리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분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

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뇌물죄로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죄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

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

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뉴스

국주영은 도의원, 지자체
공무원 인권강령 제정 등 촉구



국주영은 도의원(전북도 인권위원)은 29일 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제1차 인권기본계획이 핵심사업 30개 중에서 30%정도만 실시되고 70%는 미실시 돼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인권정책 규범화단계(1단계)에서 미실시된 ‘도민인권선언’과 ‘지자체공무원의 인권강령’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도민인권선언은 전북도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해 도민참여형태의 인권선언을 제정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지자체공무원의 인권강령을 제정해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교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제도화단계(2단계)에서는 전북도의 회 내의 인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현행 인권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인권위원회의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화단계(3단계)에서는 인권실태 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뒤 전북도민의 인권의식을 토대로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화단계(4단계)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인권지도 만들기 사업을 2차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주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인권에 관련한 사업과 과제를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꼭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잼버리 성공, 긍정적 효과 크다’

민주 김윤덕 의원, ‘새만금 잼버리 성공’ 주제 강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높아지고 문화 알릴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9일 전북도 인제개발원에서 전북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시·군 공직자 여러분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하는 세계잼버리를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행사이다”면서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게 되면, 대한민국 공의 국제적 지위와 신뢰가 높아져, 전세계 미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발전상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의 입장에서 대규모의 국제 행사에 필요한 국제공항, 항만, 레저 스포츠 시설 등 국가적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해 새만금을 조기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부각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 방문

민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오늘 부산서... 전북 현안 직접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예산 관련 참정·지방정부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오늘 전북 부안을 찾는다.

당대표 당선 이후 첫 전북 방문인 이낙연 대표는 이번 일정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방문과 현장브리핑, 그

리고 전북 예산에 대한 회의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낙연 당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북의 현안과 전북형 뉴딜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심의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주요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분과’를 출범하는데 발맞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잇는 가교역할을 약속할 것이며, 전북형 뉴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 시군의회의장들 ‘순창 유등지구, 배수개선 신규지구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회장)는 농민들의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순창 유등지구(유등, 적성, 풍산)를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9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5차 월례회의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순창 유등지구를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렇다 할 배수 개선시설이 없는 순창군 적성면 신월마을, 유등면 외이마을, 풍산면 대가마을 등 피해 집중 지역들은 2010년과 2011년에도 유사한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당시에 농어촌공사는 재방방직책 등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의 핵심은 맞춤형 배수개선사업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여러 차례의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다 이번처럼 농민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회장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와 태 수위조절 실패로 심심장 하류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순창 유등지구를 2021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북지역본부장·순창지사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효상 기자

국민의힘 “전북과 동행할 것”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전주시 소재 탄소융합기술원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 전북 기초단체장들은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전주를 찾아 전북 기초단체장과 정책협의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대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양석 사무총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 전북 동행 국회의원 11명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의힘 전북 동행 국회의원-전북 기초단체장 정책협의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의 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1년 전북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을 비롯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전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국회의원들이 호남에 제2의 지역구를 갖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형 일자리산업의 전진기지 전북을 위해 정책개발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 대

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라며 “민주당과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공의료대학 설립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주시 소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해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이후 호남에서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호남지역에 동행 국회의원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는 등 호남 주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상생과 화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호남공공포토프로젝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K-뉴딜위원회, 내달 2일 지자체장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는 11월 2일 월요일 14시,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을 좌장으로 염태영 당 최고위원과 황숙주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김입준 군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뉴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조영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

개발실장이 토론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자치단체 토론회를 통해 K-뉴딜이 자치단체에 안착 하기 위한 방안과 신규사업을 찾고 K-뉴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당과 도, 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을 찾아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들까지도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고 균등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